

서울회생법원-신용회복위원회
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연계
업무협약 체결

祝 辭

2019. 1. 17.

금융위원회 부위원장

김 용 범

<축하 말씀>

□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입니다.

-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간 협약체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
- 취약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지원을 위해서 그간 양 기관이 기울여주신 노력에 감사드립니다

□ 그간 법원과 신복위는 공·사 채무조정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채무자구제 제도의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음

- 지난 '02년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가 먼저 도입되고, 통합도산법 제정으로 '04년에 개인회생 제도도 도입
- 이후 개인회생 제도가 개선되면 신복위 제도도 그 장점을 수용하는 식으로 양 제도가 상호보완적으로 개선돼 왔음
- '13년부터는 신복위가 채무자의 개인회생·파산 신청을 지원하는 **Fast-Track** 제도가 운영되어 제도 간 연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음

□ 특히, 2017년 3월 서울회생법원 출범 이후 채무자 구제제도 전반에 걸친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눈에 띈다

- 채권자 중심의 사적 채무조정 절차와 법원절차와의 연계도 더욱 강화되었다고 생각함
- 이번 협약체결도 회생법원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고 들었음
- 이경춘 법원장님께서 재임기간 중 많은 성과를 내주신 데 대해 금융당국 입장에서조차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

<이번 업무협약의 의의>

- 오늘 협약체결 대상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은 중요성에 비해 해법은 찾기가 어려운 과제임
 - 주택담보대출은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주거권과 직결되므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채무조정이 필수적이며,
 -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위기에 대비한 안전판이 필요
 - 반면, 담보권 침해소지가 있고 채권매각, 경매 등 회수 방법도 다양하여 채권자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것이 한계
- 결국, 채권자와 채무자간 협상의 場을 마련하고 채권자 동의 유인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함
- 이번 방안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도 신복위를 통한 주담대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큰 특징
 -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는 개인회생중 경매를 피하면서 신복위에서 채권자와 다시 한번 협의할 기회를 가지게 됨
 - 또한, 이번 협약을 통해 공·사 채무조정 간 협력관계에 서로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는 점도 의미가 있음
 - P-plan, Fast-Track 등 종전에는 사적절차를 법원이 사후에 인정하는 ‘先後 관계적 협력방식’이었다면,
 - 이번에는 법원과 신복위가 강점이 있는 분야를 각자 담당하면서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‘並行적 협력방식’임

□ 양 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함

○ 새로운 제도인 만큼 참여자인 채무자와 채권자뿐 아니라
운영기관인 신복위와 법원의 적응과정도 필요할 것임

- 가시적 성과에 대한 조급한 기대보다는 세부 운영절차를
다지고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점진적 접근이 필요

○ 정부와 신복위도 금번 협약을 계기로 주담대 채무조정이
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음

- 우선,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장기간 대손
준비금을 쌓아야 하는 부담을 완화*하고,

* (기존) 5년간 정상회수시 면제 → (개선) 1년간 정상회수시 면제

- 채무조정 방법도 다양화하여 채권자가 주담대 채무조정
협상에 적극 임하도록 유도할 계획

<향후 금융당국의 채무조정 지원정책방향>

□ 최근 우리사회는 빚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을 탈피하고
채무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자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

○ 재산권 보호, 계약의 자유, 그리고 자기책임의 원칙을
중시하여 불가침의 영역으로 보아왔던 채권자의 권리도,

- 채무자의 인격과 생존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
있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속속 제도화되고 있음

○ 다만, 여느 사회 이슈와 마찬가지로 채무조정도 과도할 경우
금융소외 확대, 신용질서 훼손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,

- 우리 경제·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정수준을 찾아나가는
노력을 지속할 필요

-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‘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’을 마련하였음
 - 정책자금지원은 보다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하고 신복위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감면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
 - 오늘 법원과 신복위간 협약체결은 정부 정책추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함
-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원하면서 다시 한 번 오늘 뜻 깊은 업무협약의 체결을 축하드립니다
 - 감사합니다